

2021년 01월 14일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



노무법인 비상

주요내용

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」이 2021년 1월 8일 통과되었습니다.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범위와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 된 만큼,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주요내용

구분	내용
중대재해 구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대재해를 ‘중대산업재해’와 ‘중대시민재해’로 구분
	<div>중대산업재해</div> <p>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개념을 차용·확장(①사망자 1명 이상,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,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)</p> <div>중대시민재해</div> <p>특정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(① 사망자가 1명 이상,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,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)</p>
의무 주체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주 뿐 아니라 ‘경영책임자 등’의 개념을 추가로 정의하여 사업대표자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를 확대함 <div>‘경영책임자 등’이란</div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

구분	내용
적용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함)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적용제외
안전보건 확보의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도급, 용역, 위탁 시의 의무확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을 ‘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’에는 제3의 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

주요내용

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」이 2021년 1월 8일 통과되었습니다.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범위와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 된 만큼,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주요내용

구분	내용
형사처벌 등의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도급,용역,위탁 등을 포함하여)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위반 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망사고 :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② 사망사고 외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③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 양벌규정에는 별도 법정형을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망사고 : 50억원 이하의 벌금 ② 사망사고 외 : 10억원 이하의 벌금
징벌적 손해배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범위 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(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)

구분	내용
시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칙 :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예외 : 공포 후 3년 경과 시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(장) ② 건설업 :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

시사점 및 대응

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」이 2021년 1월 8일 통과되었습니다.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범위와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,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시사점 및 대응

시사점 1. 경영책임자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 의무 신설

-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이행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, 실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위주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→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의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함

시사점 2. 중대시민재해 규정 신설

-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,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사고에 대해서도 관련 대표자 등을 처벌하고자 중대시민재해를 새로 정의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재해의 개념에 포함시킴

시사점 3. 도급인 등 의무 범위의 확대

-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소 중 22개 위험장소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→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등 업체의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함

시사점 4.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처벌의 강화

-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위반과 사망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

- 중대재해처벌법은 해석상 논란이나 운영상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,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 등을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회사의 규정,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함

End Of Document